

 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18. 3. 14.(수) 배포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도시건설국	해명 보도자료 PRESS RELEASE	제공부서 도시재생과	도시재생과 ☎ 710-2750
동영상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(웹하드)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후속자료 : 없음			

원도심 도시재생 3년째 표류, 사실은 이렇습니다
제주시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견 반영 정상 추진중

보도개요

- 보도일시 : 2018. 3. 13.(화)
- 보도사항
 한라일보, 제주의소리, 헤드라인제주 (“원도심 도시재생 3년째 표류” 등)

보도내용

- 원도심 재생사업이 3년째 표류하고 있으며,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자되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역사성과 장소성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무시됐고, 사업계획과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와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

사실은 이렇습니다

-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2015년 12월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16년 5월과 10월에 국토부의 1,2단계 관문심사를 거쳐 2017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국가지원사항이 최종 결정(총사업비 182억원 중 국비 91억원 지원 결정)되어 지난해 12월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다.

- 현재 제주도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‘도시재생은 지역 주민들이 도시 재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참여가 관건’ 이라고 판단해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- 실제 2017년 한 해 동안 11개(153명)의 주민협의체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도시재생 관련 8개 단체(109명) 등 총 262명의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직접적으로 참여 중이다.
- 올해부터는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.
 -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관덕정 광장 및 주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‘관덕정주변 활성화를 위한 주민모임 결성’ 을 지원하고 △관덕정주변상인 설문조사(71개소) △주민 1대1 대면 인터뷰 (인터뷰 39회에 총 141명 참여) △주민의견 수렴함 배치 및 온라인 의견 접수(총 43건)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,
 -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초등학교 김영수 도서관에 5억원을 투자하여 마을도서관으로 조성, 2학기부터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마을교육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.
 - 또한, 부족한 도시재생 거점공간 마련을 위해 부지매입비 20억원을 편성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
- 문재인 정부 지난 해 12월 전국 지자체 도시재생박람회에서도 제주가 최우수상을 수여!
 - 지난해 12월 22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‘2017 도시재생 한마당’ 에는 전국 50여 지자체들의 사업 중 1차 예선을 통과한 최종 12곳의 사업을 선정한 후 본선인 경진대회에서 최종 사업결과에 대해 평가를 한 후 수상을 하는 자리였다.

- 이는 삼도2동부녀회 주민협의체가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, 제주 대학생들과 협력해 ‘한짓골생활협동조합’을 결성하는 과정과 지역의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함께 조성하는 모습 등이 우수하게 평가되며, 명실공히 전국 최우수로 인정을 받은 것이라 풀이된다.
- 제주의 도시재생사업은 제주지역에서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마을 발전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주민 주도형으로 진화중이다.
- 2017년 선정된 뉴딜사업에 제주시 일도2동(신산머루)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과 서귀포시 월평동(월평마을) 주거지원형 사업이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중이다.
- 오는 2021년까지 각각 83억 원(국비 50억 원)과 98억7천만원(국비 59억2천만원)이 투입될 예정이다.
- 현재 계획 수립 단계로 올해 하반기 관련 사업들이 확정되고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면 뉴딜 시범사업 또한 본격적으로 추진될 방침이다.